

수용자 생산자 매개자 중심의 음악분야 예술정책

홍 승 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소 위 문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들이 벌써부터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문화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국민의 문화 향수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NEA(National Endowment of the Arts)는 예술 교육의 효과를 4C(Civilization 문명화, Communication 소통, Creativity 창조성, Choice 선택의 기회)로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의 예술교육을 해체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링컨센터나 스미소니언박물관 등과 같은 예술기관의 예술교육 기능을 강화해 왔던 미국은 사회 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선택의 기회를 얻고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문화매체부가 ‘Children & young people(청소년), Community(공동체), Economy(경제성), Delivery(전달)’ 등의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과 사회 교육에 있어 예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예술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고 제공자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신체단련과 예술감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람직한 예술을 선별할 수 있는 감각과 식견을 가지도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을 연상케 하는 발상이었다. 이후 2002년에는 자크 랑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예술·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각급 학교가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도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처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3국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주된 흐름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생산자 중심의 문화와 예술에서 수용자 중심의 문화와 예술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정책과 노력 필요

선진국의 사례가 이러니 무턱대고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도 그 힘을 얻어가고 있는 바, 향후 우리의 문화예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함이 마땅할 것이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수용자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경우, 미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자의 위축과 왜곡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할 수 있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예술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아직 매개자를 충분히 배양하고 활용할 방안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이 감당해야 할 숙제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모든 문화현상이 추스르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통합하는 모습 또한 만만치 않음을 감안한다면 이전과 같이 음악과 무용, 연극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

생산자를 지향하는 음악분야의 문화정책 사업으로는 '실내악 및 창작음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현대음악 연주단체 지원강화', '상주 작곡가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었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내악과 우리나라 창작음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공립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주자나 연주단체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 이상 창작곡과 실내악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자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의 개요다.

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각 장르의 새 예술정책을 논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 서로 중복되는 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로는 이 세 영역을 묶어 공연예술 분야로 함께 논의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 세 분야의 공통적인 정책 대안은 각각이 중복되므로 언급하지 않고 연극 분야를 언급하는 글에 포함해서 다루기로 했으니 여기서는 특별히 음악과 관련된 논의만 간추리기로 하겠다.

음악의 실제적 향유 · 생산 지원에 초점

수용자를 지향하는 음악 분야의 새 예술정책으로는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감상 프로그램의 강화'와 '아마추어 합창단과 아마추어 밴드 창단 및 활동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먼저 전자의 경우 음악의 수용자로서 갖춰야 할 감상의 습관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래 부르기과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음악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에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의 종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의를 얻는다 해도 교과과정상 음악교과에 배정된 수업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음악 감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당장 교과과정 안에서 감상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못한다면 수업시간 외의 특별활동으로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음악을 생활 속에 수용하는 방법이라면 감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체험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

마추어 음악활동이 중요하다. 앞서의 두 가지 정책 제안 가운데 후자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추어 음악활동 가운데 특별히 합창과 밴드활동을 우선하자는 것은 비용이나 난이도의 측면에서 당장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활동인 만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합창활동이나 밴드활동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혹은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음악협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며, 직장의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파견하고 그에 소요되는 적정 비율로 국가와 직장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가의 예산 지원 대신 제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합창단과 밴드를 결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는 학교와 직장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각급 대학으로 하여금 전문 지도자 양성과정을 두도록 장려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합창대회와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자를 지향하는 음악분야의 문화정책 사업으로는 '실내악 및 창작음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현대음악 연주단체 지원강화' · '상주 작곡가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었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내악과 우리나라 창작음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 · 공립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주자나 연주단체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 이상 창작곡과 실내악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자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의 개요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사업은 역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미치고 있는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우리의 창작음악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현대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역량있는 연주단체를 설립하거나,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중인 단체들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창작곡들이 청중들 이전에 연주자들로부터 먼저 외면되고 있는 현실에서 작곡가들로 하여금 연주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연주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이상 정규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창작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 대강의 내용이다.

한편 매개자를 지향하는 음악분야의 새 예술정책은 공연 예술 전반에 고루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음악정보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과 음악에 관한 정보와 조언, 교육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기존의 문화예술 시설이나 기관에 상주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고 '공연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턴십 제도를 지원하여 활성화하자는 쪽에도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이 밖에 미처 언급하지 못한 음악분야의 많은 정책안들은 앞서의 설명에서처럼 다른 공연예술 분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고, 향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함께 논의할 내용이기에 생략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